

# 전남대 정외과 로스쿨 준비반 만든다

광주·전남선 처음… 타 대학·학과 개설 잇따를 듯

내년 3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광주·전남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 로스쿨 준비반이 개설된다.

법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로스쿨 준비반은 개설된 것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운영 취지와도 맞아, 다른 대학 및 학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준비반 개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 정외과는 이미 지난해 1학기부터 로스쿨을 염두에 두고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신설했다. 현재 법대에서 초빙된 교수가 진행하는 이 강의에는 매 학기 50~60명이 꾸준히 수강하고 있다.

윤성석 학과장은 "미국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35%가 정치학과와 외

교학과 출신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학과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과목을 개설했다"라고 말했다.

전남대 정외과는 학과 내 20여명의 로스쿨 준비학생들을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만들고, 법학 관련 커리큘럼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 입학에 필수인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시험 노하우를 축적할 방침이다.

로스쿨 준비반은 정외과 3~4학년 학생 및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 학년 평점 4.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등의 기준을 통과 구성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참여자21 등 광주·전남 5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는 12일 낮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퍼포먼스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등록금 인하 투쟁 본격화

대학생·시민단체, 퍼포먼스·서명 운동 나서

광주·전남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등록금 인상 관련 공동대응이 본격화했다.

특히 등록금 인상 저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대 학생들은 5월에 치러질 총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장하고 나서 등록금 인하 투쟁의 양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는 12일 낮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등록금 인하

포먼스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행사에는 대학생들도 가세해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교육재정 GDP 7% 확보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정책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남대 총학생회는 교내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학내 가두행진을 통해 등록금 인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집회 후 대학본부를 방문,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에게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학생간 협의체 구성 ▲학생들의 총장 선출권 보장 ▲학교 측의 공식적인 국립대 법인화 반대 성명 발표 ▲등록금 상한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대학생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등을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집회 후 대학본부를 방문, 기획처장과 학생처장에게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학생간 협의체 구성 ▲학생들의 총장 선출권 보장 ▲학교 측의 공식적인 국립대 법인화 반대 성명 발표 ▲등록금 상한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대학생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등을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판·검사 성과급제 평가 어떻게..."

### 질적·양적 업무 기준 애매 '골머리'

올해부터 판·검사도 '성과급제'가 도입됐으나 평가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12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각각 지난달 18일과 22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무성과급 지급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통상 고법 부장판사와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을 제외한 15호봉 이하 판·검사 4천500여명은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갑·을·병·정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연간 두 차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갑등급(상위 15% 이내)은 지급기준액(9호봉 전년도 월 봉급

액)의 130% 이상, 을등급(15~35%)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70%)은 기준액의 80%, 정등급(상위 70% 초과)은 기준액의 70% 이하를 받게 돼 있다. 예산도 확보됐고,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됐지만 문제는 성과급 등급 기준이다.

판·검사 업무를 관찰건수, 기소건수, 기소 후 유죄건수 등 양적으로 따지기도 애매하고, 질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며 대다수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자칫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관에 대한 직무성과급 지급은 재판관 독립과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정신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 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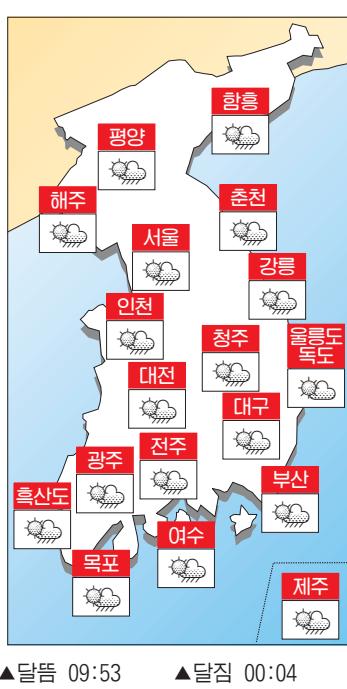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  
다.

광주	흐려져 비	7~17°C
목포	흐려져 비	6~16°C
여수	흐려져 비	9~14°C
완도	흐려져 비	7~15°C
구례	흐려져 비	4~17°C
해남	흐려져 비	4~16°C
장흥	흐려져 비	3~16°C
순천	흐려져 비	4~17°C
광진	흐려져 비	3~16°C
전주	흐려져 비	6~17°C
원주	흐려져 비	6~18°C
충북	흐려져 비	3~18°C
충전	흐려져 비	6~11°C

3월 13일

(음 2월 6일)

◇전국날씨



## 공개수배 비웃듯 또 절도

### 나주서 금은방 2곳 잇따라 털려

나주경찰이 지난 설날에 발생한 이창동 금은방 절도사건의 용의자들을 최근 공개수배한 가운데 이를 비웃듯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금은방이 털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3시께 이창동 A 금은방에 절도범이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18K 금반지 등 4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 지역은 금은방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지난달 7일에도 20~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B 금은방에 침입해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는 등 2004년 이후 5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하지만 나주경찰은 현재까지 단 1건의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데다 A 금은방은 나주경찰서 영산지구대와 불과 200여m 거리에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인은 대로변에 있는 A 금은방의 방범셔터와 출입문을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과 동일범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금값이 오르면서 광주시 서구와 여수, 나주 등에서 잇따라 금은방이 털렸으나 아직까지 범인들은 검거되지 않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인터넷 도박 사이트

### 억대 챙긴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유모(39)씨를 도박장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7월 2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도박사이트

를 운영해 접속자들에게 속칭 '바둑이'와 '포커' 도박을 하게 한 뒤 딜러비 명목으로 1억6천만 원을 쟁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역 가맹점과 가맹점을 종괄하는 총판 등을 모집해 한 차례 게임당 판돈의 3.5%를 자신이 챙겼으며 0.5%는 총판업자에게, 3%는 가맹점 업자에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양산단 인근 주민들 알레르기 고통 심하다

### 환경과학원 조사

로 10km내 주민(조사군)과 10km 외 주민(비교군)으로 나눈 뒤 알레르기症 집단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군의 11.2%가 '알레르기症 피부질환을 경험했다'고 답해 비교군의 8.3%보다 높았으며 알레르기症 눈병을 경험한 주민의 비율도 조사군이 28.3%인 것으로 조사군과 비교군의 22.4%를 웃돌았다. 반면 알레르기症 비염의 경험 비율은 조사군(18.8%)과 비교군(19.2%)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지난해 광양산업단지가 걸쳐있는 광양시와 여수시, 경남 하동군 등 3곳의 주민 2천545명을 거주 지역별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회사 대표 K씨와 갈등이 생겨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H씨와 K씨를 차례로 찾아가 '사건화 하지 말라'고 말한 협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L경사가 이 일이 불거지기 전 K의 사건을 맡아 직접 구속 기록을 내렸던 적이 있었던 점을 중시해 L경사가 K씨에게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L경사는 2006년 12월 전남도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친척 H씨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